



주간 통일정세

2011-3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김정일·정은, 악연 '여맹' 공연 관람(9/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함께 전국여맹예술소조종합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11일 김 위원장의 공연관람에는 김정은 이외에도 김기남 당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박도춘 당비서, 리영수 당 부장, 리재일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수행했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은 후계자 시절 계모인 김성애 전 여맹 위원장과의 치열한 권력싸움 때문에 한때 조선민주여성동맹 핵심간부를 지방으로 축출하고 지방조직을 해산시켜 조선직업총동맹에 흡수시키는 등 여맹을 무력화할 정도로 여맹과 오랜 악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여맹 공연 관람은 이례적임.
- 김 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을 대동하고 여맹의 공연을 관람한 것은 앞으로 후계체제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여맹의 역할을 적극 활용할겠다는 의도

● 北총리, 평양 식료품공장 시찰(9/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총리가 지난 11일 금성식료공장과 평양8월풀가공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14일 밝힘.
- 중앙통신에 따르면 최영림은 금성식료공장 밀짚직장, 8월풀가공공장 내 8월풀당가루생산공장을 돌아본 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협의회를 진행

● 北 "5·24조치 철회해야 남북관계 개선"(9/14,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남한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의 철회를 요구
- 노동신문은 이날 '제거돼야 할 북남관계 개선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글에서 "남조선당국이 북남 사이의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온 겨레의 한결같은 배격을 받는 5·24 조치를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신문은 "북과 남이 불신과 오해의 감정을 풀고 관계개선을 도모해나 가지면 남조선 당국이 낡은 대결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북남 사이의 내왕(왕래)과 접촉, 협력과 교류를 가로막는 5·24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북남관계의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
- **김정일 "북러관계 발전 확신"(9/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북러관계의 발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 김 위원장은 이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생일 축전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조러 친선협조 관계가 최근 우리 사이의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정신과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계속 좋게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 **"식량조달 실패 北무역성 간부들 구속·경질"(9/15, 오늘의북한소식)**
 - 대북 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은 15일 발간한 '오늘의 북한소식'(420호)에서 대북소식통을 인용, 북한당국이 최근 무역성 부상(차관급)과 참사(차관보급)를 직무태만 및 과제 미완성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국장급 직원 7명을 경질했다고 밝힘.
 - 구속된 무역성 부상 등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에서 장기간 활동했지만 중국 측이 후불계약을 거절함에 따라 식량조달 계약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짐.
 - 좋은벗들은 내각 정치국 호위사령부와 국방위원회 연합검열조가 무역성을 대상으로 과거 세입·세출 등에 대한 누수 항목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 중앙당 간부 등의 말을 인용, "무역성 간부 구성원 중 약 90%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리용남 무역상도 역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함.
 - 한편 좋은벗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성과가 '별것 없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평양에서 쌀값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식량난을 의식한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들에게 '추석을 간소하게 쇠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함.
- **"북한, 키신저 전 미국무에 방북 요청"(9/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최근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
 - 중국의 대북소식통은 지난달 초 북한 국방위원회 소속의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초청했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단지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고 RFA는 전함.
 - 북한은 2008년에도 미국을 방문한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을 통해 키



신저 전 장관의 방북을 요청했지만, 당시 키신저 전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는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외교정책포커스'의 존 페퍼 편집장은 RFA에 "북한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영향력 있고 친중인사인 키신저 전 장관과 대화를 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처럼 북한에도 문을 열도록 키신저 전 장관이 설득하기를 기대했을 수 있다"고 말함.

■ 김정일동향

- 김정일, 전국 여맹소조종합공연 관람(9/12, 중통·중방)
 - 김정은, 김기남, 김경희, 장성택, 최용해, 박도춘, 이재일, 당중앙위와 여맹중앙위 책임일꾼들 등이 함께 공연 관람

나. 경제

● 1~7월 남북 교역 작년보다 16% 감소(9/12, 연합뉴스)

-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남한이 북한으로 보낸 반출액은 4억 4천736만 달러, 반입액은 5억1천19만 달러로 총 교역규모는 9억5천 755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반출액으로는 작년 동기(5억1천976만 달러)에 비해 14% 줄어든 것이며 반입액도 1년 전 6억2천503만 달러에서 18% 감소했으며, 작년 같은 기간 교역액이 11억4천479만 달러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6% 감소
- 남북한 교역 감소는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폭격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뉴스는 전함.

● "北-中, 나선특구 전력공급 6월 합의"(9/13, 연합뉴스)

- 중국이 나선 경제특구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지난 6월 북한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대북소식통은 13일 "지난 6월8일 북한 나선에서 개최된 나선시와 중국 지린(吉林)성의 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국이 나선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며 "최근 중국 측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고 밝힘.
- 북중 전력분야 협력 합의문에는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나선특구의 전력 프로젝트는 훈춘(琿春)~나진 고압배전과 나선화력발전소 건설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중국 국영기업이 맡는다고 이 소식통은 전함.



- **황금평.라선 착공 3달.. "투자 실적 전무"(9/14, 연합뉴스)**
 - 중국이 나선 경제특구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지난 6월 북한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대북소식통은 13일 "지난 6월8일 북한 나선에서 개최된 나선시와 중국 지린(吉林)성의 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국이 나선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며 "최근 중국 측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고 밝힘.
 - 북중 전력분야 협력 합의문에는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짐.
 - 나선특구의 전력 프로젝트는 훈춘(琿春)~나진 고압배전과 나선화력발전소 건설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중국 국영기업이 맡는다고 이 소식통은 전함.

- **"러시아, 나진~하산 철도 내달 시범운행"(9/14, 레일)**
 -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철도의 개보수 공사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 철도공사가 오는 10월 이 철도에 시범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영국의 철도 전문 웹사이트인 '레일'(rail.co)이 14일 보도
 - 러시아 측은 나진항 화물부두로 이어지는 이 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러시아 철도공사는 연내에 나진~하산의 본선과 지선을 합쳐 64km의 선로를 부설하고 선로전환장치 56개를 설치할 계획

- **FAO·WFP, 곡물작황 조사차 내달 초 방북(9/15, 미국의소리(VOA))**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다음달 3일부터 17일까지 방북해 곡물 작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4개 소그룹으로 나뉘어 북한 전역에서 수확 중인 곡물을 직접 점검해 수확량과 식량부족량을 산출할 예정이며, 또한 별도로 취약지역의 병원과 가정을 방문해 식량 섭취량과 영양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
 - FAO와 WFP는 지난 1995년부터 북한 당국의 초청을 받아 2005~2007년,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한 두 차례 방북해 작황 조사를 하고 있음.

- **"北 노동당, 주민에 '강성대국 헌금' 강요"(9/15,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앞세워 주민들로부터 헌금을 강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 내부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15일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시장과 도심 거리를 비롯해 군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강성대국은 우리 자신이 마련하고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강연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함.



- 강연회에서 다른 도(道)·시(市) 주민들의 납부 사례를 비교 선전하거나 강연 후 당에서 동원된 주민들이 돈을 내는 모습을 연출하며 현금경쟁을 부추기는 것으로 전해짐.
 -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그동안 주민들에게 희천발전소 건설과 평양 10만호 주택건설 등 각종 계기 때마다 현금을 부과해왔는데 최근에는 군중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모금을 강요하는 새로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함.
 - 노동신문도 주민들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노동신문은 지난달 20일자 정론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7월27일 새벽 큰물(홍수) 피해 현장에서 소를 구원하고 숨진 리성진 동무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그의 고귀한 정신세계를 온 나라가 따라 배우도록 해주시었다"면서 "바치려는 사람보다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라가 허약해지고 결국 조국은 번영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
- **北 주민 600만 명, 식량 부족 위기(9/15, 블룸버그통신)**
 - 국제 사회의 원조 감소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4분의1에 해당되는 600여만 명이 올해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인용, 보도
 - FAO 아시아 지역 대표인 코누마 히로유키는 이날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름철 홍수와 지난 겨울 동안의 한파 등으로 북한 쌀 작황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경우 70만 정도의 식량이 부족해 북한 주민 600만 여명이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힘.
 - 지난 14일 사흘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방콕에 입국한 코누마 대표는 "미국 등이 김정일 정권의 자금줄 차단을 시도하면서 북한에 대한 원조가 감소한데다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해 북한 당국이 자체적으로 식량 부족분을 메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함.
 - 코누마 대표는 "북한의 식량 상황은 내년에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면서 "FAO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강조
 - **北中 합작 자동차조립공장 생산 시작(9/16, 내나라)**
 - 북한이 자동차 조립 생산을 위해 중국기업과 함께 설립한 평운중성합영회사가 자동차 생산을 시작했다고 북한의 공식 포털사이트 '내나라'가 16일 전함.
 - 내나라는 이날 "평운중성합영회사 차조립공장이 생산을 시작했다"며 "이 공장은 조선의 수도여객운수지도국과 중국 단둥중조변경무역유한공사가 합영기업으로 설립했다"고 밝힘.



- **유럽 산업시찰단 내달 북한 방문(9/16, 미국의소리(VOA))**
 - 유럽 기업인들이 다음달 17일부터 2박3일 동안 사업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
 -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인 '유럽아시아협력국'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북한 산업시찰단을 모집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북 계획을 밝힘.
 - 유럽 기업인들은 북한에서 공장들을 직접 방문하고 북한의 정책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망을 구축하며 10월17일에는 연례행사인 '평양 추계 국제상품전시회'에 참석할 예정

- **"北-EU 을 상반기 교역 60%↓"(9/17,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상반기 북한과 유럽연합(EU) 사이의 교역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가량 감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함.
 - 방송은 EU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올 1~6월 EU와 북한 간 교역 규모는 4천580만 유로로 작년 상반기의 1억1천550만 유로보다 60%가량이 줄어든 액수라고 설명
 - 북한의 대 EU 수출액은 3천17만 유로, 수입액은 1천560만 유로이며 EU 국가 중에서 북한과의 교역액이 많은 순서는 독일(1천800만 유로), 네덜란드(1천360만 유로), 이탈리아(380만 유로) 등임.
 - 북한이 EU에 많이 수출한 품목은 의류(1천만 유로), 소금 및 유황(850만 유로) 순이었고 북한이 EU에서 많이 수입한 품목은 기계류, 광학 물질, 전기제품 등임.

■ 기타 (대내 경제)

- 최영림 총리, 9.11 금성식료공장과 평양8월풀가공공장 현지 了解 및 '협의회' 진행(9/13, 중통·평방)
-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식량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곡식을 허실 없이 말끔히 거두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을걷이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냄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추동할 것"을 煽動(9/14, 중통·민주조선)
- 黃海南道 신천군 새길협동농장 일꾼들,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서 성과(9/15, 중통)
- "식량문제의 자체해결은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애국사업"이라며 '適期에 가을걷이와 낱알 털기 全民 총동원·총집중' 再次 독려(9/16, 중통·노동신문·중방)
- 咸鏡北道 청진시 '염분진호텔' 건설 힘 있게 추진中(9/18, 평방)



다. 군사

- **"북-러시아, 합동군사훈련 합의"(9/13, 아사히신문; 이타르타스통신)**
 - 북한과 러시아가 이르면 올해에 합동 군사훈련을 처음으로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서울발로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양국 군이 벌이기로 한 훈련은 전투기 조종사가 조난했을 때에 대비한 수색 구조 훈련으로, 이르면 연내에 러시아 극동 지역 해상에서 양국의 해·공군 병사가 참가해 훈련할 것으로 예상
 - 아사히신문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8월 정상회담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게 공격 훈련을 포함한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제안했지만, 러시아 측이 난색을 보여 수색 구조 훈련을 벌이는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전함.
 - 이 신문은 또 북한이 한·미·일 군사 연계 강화에 맞서 중국에도 합동 군사훈련을 제안했다거나 8월 북러 정상회담에 수행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나 주구창 조선노동당 기계공업부장 등이 러시아 측에 무기·부품을 공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러시아가 응하지 않았다는 정보도 있다고 덧붙임.
 - 앞서 이타르타스 통신은 지난 8월 콘스탄틴 시덴코 동부 군관구 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군 대표단이 합동 군사 훈련 등 양국의 군사 협력을 재개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북했다고 전한 적이 있음.

- **"북한 군인 절반 굶주림 상태"(9/13, 텔레그래프)**
 -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는 과거에는 민간인들에게만 국한됐지만 금년에는 상황이 나빠지면서 북한 군인의 절반 정도가 굶주림을 겪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가 13일(현지시간) 일본에 본부를 둔 비디오 저널리스트 단체인 아시아 프레스 인터내셔널이 입수한 비디오 화면을 토대로 보도
 - 이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군의 한 어린 병사는 '부대원 가운데 영양실조를 경험한 군인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영양실조에 걸린 군인이 금년 봄에는 50%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대답
 - 정부의 지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한 장교는 군인들의 한 끼 식량이 단지 100g에 불과하다고 전함.
 - 유엔 산하 기구인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은 금년 4월 북한에 대한 비상 식량 구조 사업을 개시했으나 금년 여름 북한의 광범위한 지역에 홍수가 발생함에 따라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심화됨.

라. 사회·문화

- **추석은 北에도 명절...김일성 조상묘 참배(9/12, 조선중앙통신)**
 - 추석인 12일 북한 주민들도 가까운 친지끼리 모여 전통음식을 먹으며 차분하게 명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에서는 김일성 추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 '민족 최대의 명



- 절이어서 추석에는 주민들이 친인척을 만나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성묘를 하며 보름달에 소원을 비는 정도로 조용하게 보내는 것으로 알려짐.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날 증조부모인 김보현·이보익, 조부모인 김형직·강반석의 묘소에 꽃을 보냈으며, 또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에 꽃을 진정(進呈)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최태복·태중수·문경덕 노동당비서, 전하철·강능수 내각부총리가 헌화에 참여
 -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에는 최영림 내각총리, 김기남 당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박도춘·최룡해·김평해 당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등이 찾아 참배
 -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전통 명절을 쇠지 않다가 1988년에야 추석을 공휴일로 지정하며 명절로 인정

● 北 소설, 프랑스어판 출간..유럽서 처음(9/14, 동북망(東北網))

- 북한 작가 백남룡의 소설 '벚'이 최근 프랑스어로 번역돼 현지에서 출간됐다고 중국의 인터넷 매체 동북망(東北網)이 14일 보도
- 동북망은 "세계에서 가장 신비한 나라인 북한을 들여다볼 창문이 열린 것"이라며 "서구인들이 처음으로 문학작품을 통해 북한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
- 이 매체에 따르면 이 소설의 프랑스어판 출간은 수년 동안 한국 문학과 문화를 프랑스에 소개해 온 프랑스인 패트릭 모리스가 맡았으며, 패트릭 모리스는 "이 소설은 반정부 책동을 위한 것도, 북한 정치를 선전하기 위한 것도 아닌 순수 문학작품"이라며 "이 작품 속에서 한 사회의 문체점이 드러난다면 건설적인 비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할.

● "평양서 수신 가능 라디오방송은 단 2개"(9/16, 연합뉴스)

- 북한 평양에서 들을 수 있는 라디오방송은 대내용 평양FM방송과 대내외용 방송인 평양방송 2개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16일 북한 관련 웹사이트인 노스코리아테크(www.northkoreatech.org)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호주인 마크 파헤이씨는 평양에 머무는 동안 숙소인 양각도호텔 32층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본 결과 단 2개의 방송만 수신
- 파헤이씨의 확인 결과 105.2MHz에서는 평양FM방송이 나왔고 89.2~106.5MHz의 13개 주파수에서는 모두 같은 내용의 평양방송이 수신
- 노스코리아테크는 "키버 지역이 좁은 FM방송은 국내용이고 평양방송은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주변국가에까지 보내는 방송으로 보인다"며 "평양방송은 단파와 중파를 모두 이용해 방송되며 특히 일본에서는 밤 시간대에 가장 수신이 잘 되는 외국방송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



■ 기타 (대내 경제)

- 北 여자축구팀, 2012년 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격 획득 소개(9/11, 중통)
- '제17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폐막식, 9.12 최룡해, 강능수, 박명철(체육상), 장웅(국제태권도연맹 총재), 김경호(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등 참가下 태권도전당에서 진행(9/12, 중통)
-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정명훈', 지휘 및 창작가들과 면담 진행(9/14, 중통·중방)
 - 국립교향악단·은하수관현악단 공연 관람 및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
- 문학예술출판사, 여러 주제의 단편소설집들 새로 출판(9/14, 중통)
 - 고귀한 의리, 삶의 보금자리, 전선길, 파도치는 기슭에서, 빛나는 별들, 억센 뿌리 등
- 北 축구대표팀, 9.18 중국팀을 1:0으로 이기고 '2002년 아시아 16세 미만 축구선수권대회' 예선 5조 1위 차지(9/18,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美 카터 지명자 "北 WMD, 직접적 위협"(9/14,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13일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는 동맹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며, 미국 영토에도 직접적 위협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카터 지명자는 이날 의회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미 정부는 북한의 WMD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 확산 행위를 면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
- 그러면서 "부장관으로 임명되면 정부 내 다른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런 위협을 줄일 것이며, 동맹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함.
- 이어 카터 지명자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 "북한의 대규모 재래 군사력과 확산 행위, 우라늄 농축과 WMD 프로그램 등을 통한 비대칭전력 확충 등은 미국과 역내 동맹국,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
- 그는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언급, "북한이 한국을 2차례 공격한 것은 북한 정권이 언제라도 도발행위를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상기시켰다"고 평가
- 이와 함께 카터 지명자는 "국방부는 북한의 무기 관련 기술의 확산을 차



단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해왔다"면서 "국제 비확산 규범 설정, 불법 화물에 대한 감시와 관련한 동맹국과의 협력 등이 이에 포함 된다"고 설명

● **주북한 中대사, 北량강도·中장백 잇따라 방문(9/14, 연합뉴스)**

- 류홍차이(劉洪才) 주북한 중국대사가 최근 북한과 중국 양국 접경인 량강도와 지린(吉林)성 장백(長白)조선족자치현을 잇따라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 최대 규모의 헤산 동(銅) 광산을 비롯해 량강도에 매장된 풍부한 지하자원의 공동 개발을 통한 북·중 경제합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주북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류 대사가 지난 2일 량강도를 방문, 북한과 중국 기업이 공동 설립한 헤산의 헤중광업합영 회사를 시찰했다고 밝힘.
- 헤중광업은 2007년 중국 완상(萬向)그룹 산하 중광귀지(中광<金+廣>國際)가 51%의 지분을 갖고 북한 량강도광업연합기업과 합자해 설립한 동광 개발 업체로, 생산 책임은 북한의 헤산청년동광이 맡고 있으나 아직 가동은 되지 않고 있음.
- 류 대사는 이어 지난 3-4일에는 북한과 중국이 공동 운영하는 압록강 상류의 운봉과 수풍 발전소에 들러 수력자원 이용 실태와 발전 계획을 점검
- 류 대사는 헤산 방문에 이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헤산과 마주한 장백(長白)현을 방문, 중국이 량강도의 지하자원 수입을 위해 건설 중인 통상구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북·중 교역 현황도 점검
- 이에 따라 류 대사가 북한의 대표적인 지하자원 산지인 량강도와 이곳에서 생산되는 지하자원의 중국 반입 통로인 장백현을 방문한 것은 라선특구와 황금평 공동개발에 이어 북·중이 북한의 지하자원 공동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

● **"北통치구조 세계 최하위 수준"(9/16, 미국의소리(VOA))**

- 류홍차이(劉洪才) 주북한 중국대사가 최근 북한과 중국 양국 접경인 량강도와 지린(吉林)성 장백(長白)조선족자치현을 잇따라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 최대 규모의 헤산 동(銅) 광산을 비롯해 량강도에 매장된 풍부한 지하자원의 공동 개발을 통한 북·중 경제합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주북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류 대사가 지난 2일 량강도를 방문, 북한과 중국 기업이 공동 설립한 헤산의 헤중광업합영 회사를 시찰했다고 밝힘.
- 헤중광업은 2007년 중국 완상(萬向)그룹 산하 중광귀지(中광<金+廣>國際)가 51%의 지분을 갖고 북한 량강도광업연합기업과 합자해 설립한 동광 개발 업체로, 생산 책임은 북한의 헤산청년동광이 맡고 있으나 아



- 직 가동은 되지 않고 있음.
- 류 대사는 이어 지난 3-4일에는 북한과 중국이 공동 운영하는 압록강 상류의 운봉과 수봉 발전소에 들러 수력자원 이용 실태와 발전 계획을 점검
 - 류 대사는 혜산 방문에 이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혜산과 마주한 장백(長白)현을 방문, 중국이 량강도의 지하자원 수입을 위해 건설 중인 통상구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북·중 교역 현황도 점검
 - 이에 따라 류 대사가 북한의 대표적인 지하자원 산지인 량강도와 이곳에서 생산되는 지하자원의 중국 반입 통로인 장백현을 방문한 것은 라선특구와 황금평 공동개발에 이어 북·중이 북한의 지하자원 공동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
- **印尼대통령 北정권 창건 축하전문(9/16, 평양방송)**
 -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북한 정권 창건 63주년을 축하하는 내용의 축전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보냈다고 평양방송이 16일 전함.
 - 유도요노 대통령은 정권창건기념일(9·9)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보낸 축전에서 "이 기회에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가 광범위한 국제문제를 다뤄나가며 가장 훌륭하게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다시 한 번 표명한다"고 밝힘.
 - **유엔 北인권보고관, 중국 겨냥 탈북자 보호 촉구(9/16, 미국의소리(VOA))**
 -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주변국가에 탈북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당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전함.
 - 다루스만 보고관이 언급한 북한의 주변 국가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지난달 24일 유엔총회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서 "제3국 현지인과 결혼한 탈북 여성과 자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국들이 이들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
 -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언급하며 "이른 시일 내에 고령자, 환자, 장기수, 아이를 둔 여성, 연좌제 수감자를 우선적으로 석방하라"고 북한에 권고하는 한편 정치범수용소를 감시하기 위한 독립적인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배급제·중앙통제식 경제의 수정 등 북한의 정책 변화도 촉구
 - **日, 北 추가 제재조치 유보(9/18, 교도통신)**
 -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주변국가에 탈북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당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전함.
 - 다루스만 보고관이 언급한 북한의 주변 국가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지난달 24일 유엔총회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서 "제3국 현지인과 결혼한 탈북 여성과 자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국



- 들이 이들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
-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언급하며 "이른 시일 내에 고령자, 환자, 장기수, 아이를 둔 여성, 연좌제 수감자를 우선적으로 석방하라"고 북한에 권고하는 한편 정치범수용소를 감시하기 위한 독립적인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배급제·중앙통제식 경제의 수정 등 북한의 정책 변화도 촉구

■ 기타 (대외 일반)

- 北 노동당 대표단(최태복 黨 비서)과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대표단 회담, 9.13 평양에서 진행(9/13, 중통·평방)
- 김영남, 9.13 駐北 나이지리아 대사(맥클린 이고니콘 오무쑈) 신임장 접수(9/13, 중통·중방)
- 박의춘 외무상, 9.13 駐北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대표(피시 워차타 미시까) 신임장 접수(9/13, 중통)
- 박의춘 외무상, 9.13 인도 외무성 대표단과 담화(9/13, 중통)
- 〈아세안의 날〉 즈음 駐北 아세안나라 외교대표들(캄보디아 대사 등), 9.13 박의춘·박길연(외무상·외무성 부상) 등 초청下 연회 개최(9/13, 중통·중방)
-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대표단과 인도 외무성 대표단 및 통일러시아당 연해변강지부 대표단, 9.13 금수산기념궁전 참배(9/13, 중통·평방)
- 김영남, 9.14 쿠바대사(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의 신임장 접수 및 대사와 담화(9/14, 중통)
- 라오스 주석, 김정일 초청에 의해 가까운 시일 내에 訪北 예정(9/15, 중통)
- 駐北 리비아경제협조사무소 소장, 9.14 공화국 창건 63돌 경축 연회 마련(9/14, 중통·중방)
 - 김용진(교육위원장), 이창근(당 부부장), 김형준(외무성 부상) 등 초대
- 北 노동신문 대표단(김원석 부주필/7.11~29 베트남·라오스 방문)의 라오스 방문일정 및 美談을 소개하며 "兩國間 전통적 친선관계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9/15, 중통·노동신문)
- 김영남, 9.15 訪北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대표단과 담화(9/15, 중통)
-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9.15 작별방문 '피터 휴스' 英國 특명전권대사와 담화(9/15, 중통)
- 김영남, 9.16 재일본 조선인 축하단(단장 : 고덕우 「총련」 부의장)과 담화(9/16, 중통·중방)



나. 6자회담(북핵)

● 美 "北에 3가지 제안..반응 기다리는 중"(9/16, 연합뉴스)

- 미국은 북한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세 가지 사전 조치를 분명히 얘기했으며, 이에 대한 북한의 명확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미 정부 당국자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 당국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미-호주 외교·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하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함.
- 그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의 7월말 미-북 뉴욕 회동을 언급하면서 "6자회담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 북한 측에 기대하는 핵과 미사일, 한국과의 문제에 대한(북한이 취해야 할) 세 가지 조치를 매우 분명히 내놓았다"고 말함.
- 이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요구하는 것과 관련, 전제 조건들(pre-conditions)이 아니라 "사전 조치들(pre-steps)"이라고 강조
- 이 당국자가 밝힌 미국이 요구한 세 가지 조치들은 우리농축활동을 포함한 핵활동 동결, 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및 한국과의 관계 개선인 것으로 관측

● 北中 6자수석대표, 19일 베이징 회견(9/16, 연합뉴스)

-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19일 중국 정부가 주관하는 '6자회담 9·19 공동성명발표 기념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함.
-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리 부상이 세미나에 참가하고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회견할 것"이라고 확인
- 이 세미나는 중국 국제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것으로, 베이징(北京) 귀지판텐(國際飯店)의 차이홍(采頌)홀에서 개최되며, 북·중 양국을 포함해 6자회담 참가국에서 주요 인사들이 상당수 참가할 것으로 알려짐.
- 장 대변인은 이어 "9·19 공동성명은 6자회담의 최대 성과로 각 측의 지혜가 발휘된 것이며, 이번 세미나는 공동성명 발표 6주년을 계기로 6자회담의 진전을 토론하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
-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의 주인은 남북한 쌍방이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근본은 남북한 관계개선이며 중국은 한결같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해왔다"며 "남북한 서로 마주 보는 태도로 접촉과 대화를 통해 부단하게 신뢰를 쌓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역설

● "남북 6자수석, 21일째 베이징서 회동"(9/16, 연합뉴스)

-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21일 전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회동할 예정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16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 핵심당국자는 "최근 남북 양측 간에 협의가 이뤄져 2차 비핵화회담을 내주 중반에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가 됐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회의 장소와 일시 등 상세 사항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 21일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함.
-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할 경우 이는 7월 하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1차 남북 비핵화회담에 이어 2차 비핵화 회담이 될 전망
- 또한 남북 양측은 이번 2차 회담에서 지난 7월 발리에서의 남북 1차 비핵화 회담과 뉴욕 북미 대화를 통해 협의된 비핵화 사전조치를 포함해 비핵화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

■ 기타 (6자회담(북핵))

- 中 상임대표(‘청징예’),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리이사회(9.14, 오스트리아)에서 “6자회담 재개는 유관 각 측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조속한 재개 강조(9/16, 중통)

3. 대남정세

- **日に 탈북자 추정 9명.. "한국 가고싶다"(9/13, 연합뉴스; 교도통신)**
 - 탈북자들을 태운 배가 2007년 이후 4년 만에 동해 쪽 일본에 흘러왔으며, 일본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한국으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13일 오전 7시30분께 동해에 접한 일본 이시카와(石川)현의 노도(能登)반도 앞바다 나나쓰(七ツ)섬 부근에서 탈북자로 추정되는 9명을 태운 어선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일본 해상보안청(해양경찰)이 밝혔으며, 배 안에는 성인 남성 3명과 여성 3명, 초등학교 정도의 어린이 3명이 타고 있었음.
 - 일본 법무성은 14일 일시 보호 형식으로 이들을 상륙시켰다가 한국으로 보낼 것으로 예상되며,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13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과거의 예를 참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함.
 - 이는 2007년 6월 아오모리(靑森)현 후카우라(深浦)항에 표류해온 탈북자 일가족 4명을 당사자들의 희망대로 2주만에 한국에 보낸 예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뉴스는 전함.
 - 교도통신은 "인도적 관점을 고려할 때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는 법무성 간부의 코멘트를 전함.
- **北수해지원 1차분 전달 불발.. "지원입장 변함없어"(9/15, 연합뉴스)**
 - 통일부는 15일 대북 수해지원 1차분 전달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북측의 반응이 오는 대로 수해물자를 조기에 전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1차분을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북측의 반응이 없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함.
- 정부는 지난 6일 오전 한적 명의로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를 통해 1차 지원분인 영·유아용 영양식 20만 개를 전달하겠다고 북측에 통보했으며, 통신문에서 구체적인 물자 인도 장소를 통보해줄 것과 남측 인도 요원의 출입 및 편의보장을 해줄 것도 요구
- 북측은 생필품 및 의약품 위주로 50억 원 상당을 지원하겠다는 남측의 제의에 대해 식량, 시멘트, 장비 등을 통 크게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었으며,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해 "종교·예술 부문에서 앞으로 목적이나 내용을 보면서 방북을 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허용 확대 가능성을 시사

● 민화협, 대북지원 6차분 밀가루 200t 전달(9/16,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덕룡)는 16일 오전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6차분 밀가루 200t(1억1천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번 지원분은 민주노총,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쌀보내기 대전충남운동본부, 북한수해지역 인도적 쌀 지원 도봉구 시민추진본부, 북녘동포큰물피해나누기운동본부에서 마련함.
- 한편 민화협과 대북지원단체 관계자 10여명은 17일 방북, 사리원시에서 밀가루 지원에 따른 2차 현장 모니터링을 할 예정

● 정명훈 "남북 합동 교향악단 연주 추진"(9/16,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덕룡)는 16일 오전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6차분 밀가루 200t(1억1천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번 지원분은 민주노총,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쌀보내기 대전충남운동본부, 북한수해지역 인도적 쌀 지원 도봉구 시민추진본부, 북녘동포큰물피해나누기운동본부에서 마련함.
- 한편 민화협과 대북지원단체 관계자 10여명은 17일 방북, 사리원시에서 밀가루 지원에 따른 2차 현장 모니터링을 할 예정

● 北 "南당국과 금강산 협상 언제든 응할 것"(9/17, 조선신보)

- 북한 김광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언제든 협상에 응한다"고 밝힘.
- 김 부장은 금강산 시범국제관광에 참가한 외신과 기자회견에서 남측과 관광재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6일 보도
- 김 부장은 남측 재산 몰수와 관련, "남측 당국이 소유한 5개 대상은 철



저하게 몰수했다"며 "남측 민간인들의 재산은 현재 법적 처분을 한 상태로 남측 기업들이 우리의 제안에 호응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주장

- 그는 현대아산이 금강산 지구에 두고 나온 발전기에 대해 "잘 보관하고 있다"며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는가에 좌우되지만 일단 법적 처분에 들어갔다"고 설명

● 남북 민간교류 물꼬에 '협력사업'도 꿈틀(9/18, 연합뉴스)

- 지난 7월 대북 밀가루 지원 재개로 물꼬가 트인 남북 민간단체 간 교류가 조만간 사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의 협력사업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남북 간 협력사업은 5·24 대북제재 조치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교류 또는 신규투자 등의 성격도 갖고 있어 협력사업이 재개되면 5·24조치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작년 5·24 대북제재 조치로 전면 중단된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통일부에 남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남북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측도 "11~12월쯤 남북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정부는 아직 모든 남북 간 민간교류에 대해 "5·24조치 범위 내에서 방북 승인 등이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고수
- 전문가들은 밀가루 등의 인도적 물자 지원, 종교 및 문화계 인사의 잇단 방북으로 이어진 남북 간 민간교류가 각종 협력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는 최근 류우익 신임 통일부 장관이 대북관계에서 유연성을 강조한 데 이어 최광식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남북관계를 푸는 복안으로 단절된 남북 간 사회·문화 협력사업의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기 때문



■ 기타 (대남)

- 지난 7월 대북 밀가루 지원 재개로 물꼬가 트인 남북 민간단체 간 교류가 조만간 사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의 협력사업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남북 간 협력사업은 5·24 대북제재 조치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교류 또는 신규투자 등의 성격도 갖고 있어 협력사업이 재개되면 5·24조치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작년 5·24 대북제재 조치로 전면 중단된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통일부에 방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남북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회측도 "11~12월쯤 남북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정부는 아직 모든 남북간 민간교류에 대해 "5·24조치 범위 내에서 방북 승인 등이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고수
- 전문가들은 밀가루 등의 인도적 물자 지원, 종교 및 문화계 인사의 잇단 방북으로 이어진 남북간 민간교류가 각종 협력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는 최근 류우익 신임 통일부장관이 대북관계에서 유연성을 강조한 데 이어 최광식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남북관계를 푸는 복안으로 단절된 남북간 사회·문화 협력사업의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 "北에 3가지 제안..반응 기다리는 중"(9/16)

- 미국은 북한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세 가지 사전 조치를 분명히 얘기했으며, 이에 대한 북한의 명확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미 정부 당국자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미-호주 외교·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하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 그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의 7월말 미-북 뉴욕 회동을 언급하면서 "6자회담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 북한 측에 기대하는 핵과 미사일, 한국과의 문제에 대한(북한이 취해야 할) 세 가지 조치를 매우 분명히 내놓았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현 상황에 대해 "우리의 전반적인 제안들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북한의 명확한 신호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 한국 측과 매우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최근 러시아 등과의 외교적 접촉을 주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요구하는 것과 관련, 전제 조건들(pre-conditions)이 아니라 "사전 조치들(pre-steps)"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가 밝힌 미국이 요구한 세 가지 조치들은 우라늄농축활동을 포함한 핵 활동 동결, 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및 한국과의 관계 개선인 것으로 관측됨.
- 한편 버락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사전조치 요구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에 따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재방북을 검토하는 기류도 있으나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베이징서 남북 핵대화..막으려는 '2라운드'>(9/16)

- 교착된 듯하던 6자회담 재개 흐름이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를 무대로 한 사상 첫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이어 제2차 회담이 내주 중 6자회담 본무대인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발리 남북대화-뉴욕 북미대화 이후 오랜 침묵에 빠졌던 평양이 마침내 입을 연 것임.
- 이는 무엇보다도 6자회담 재개의 '길 닦기' 성격인 남북-북미 양자접촉이 '2라운드'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는데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음. 서로의 의중을 타진해보는 탐색전에 그쳤던 '1라운드'에 이어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하는 본 게임이 시작되는 셈임.



- 이는 특히 '라운드'의 양자접촉 패턴대로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이어 적절한 시기에 북미 고위급대화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
- 6자회담 개최지인 베이징이라는 무대의 상징성도 주목됨. 남북 양측이 '편의성'을 따져 장소를 선택했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지만 6자회담 틀 안에서 이번 남북 간 양자접촉이 진행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임.
- 또 남북 간 2차 비핵화회담은 핵을 의제로 하는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일회성'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도 남북관계의 변화 측면에서 주목해볼 대목임.
- '라운드'의 개막에는 큰 틀에서 볼 때 어떤 식으로든 대화의 흐름을 살려나가려는 남·북·미·중의 강한 컨센서스가 작동한 것으로 분석됨.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둘러싼 평행선 대치는 여전하지만 우선 후속대화를 통해 간극을 줄여나가면서 국면을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임.
- 특히 이번 비핵화 회담은 북·미간 뉴욕채널을 중심축으로 북한을 설득해내려는 한·미·일·중·러 5자의 물밑 외교전이 활발히 가동된 결과물로 보임. 우리 측 위성락 6자회담 수석대표는 지난달 말 중국을 방문해 대북 설득역할을 주문했고 지난주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후속대화의 방향과 수순을 긴밀히 조율했음.
- 그러나 이번 회담이 순조로운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임. 우리 측이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비핵화 사전조치의 수위를 둘러싸고 양측 간에 첨예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이번 회담은 미·중이 관여하는 '대리전'의 성격을 띠고 있음.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19일 중국 외교부 주최 9.19 공동성명 세미나 참석을 겸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를 만남.
- 비핵화 회담에 앞서 북·중이 서로 주파수를 맞춰보는 계기임. 우리 측 위성락 수석대표는 이미 지난주 워싱턴으로 날아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회동했음.
- 이미 남북 간에는 전선이 분명함. 정부는 한미일 공조의 틀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의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핵과 장거리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을 비핵화 사전조치로 일괄주문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달 말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WMD 실험을 모라토리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모호한 답을 내놨음. 비핵화 사전조치를 일괄수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듯 한 태도를 취한 것임. 그러나 한·미는 "불충분하다"며 냉담하게 반응했음.
- 최대 쟁점은 북한 UEP가 될 가능성이 큼. 한미 양국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취해야할 사전조치의 첫머리로 UEP 중단을 제시하고 있음. 여기에는 일본이 가세하고 있고 러시아도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있음.
- 그러나 '협상의 파이'를 키우는 게 급선무인 북한이 가장 중요한 협상카



드를 6자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특별한 보상 없이 포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북한은 중국을 '우군'으로 삼아 UEP 문제를 피하면서 비핵화 사전조치의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큼.

- 이 같은 참여한 전선 속에서 남북 어느 일방이 '양보'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서로의 입장차만을 확인하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는 회의적 시각이 나옴.
- 다만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상황이 급진전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음. 내년 강성대국 건설을 앞둔 북한으로서는 6자회담이라는 틀을 통해 대외관계 관리와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낼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의표시'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임. 북한이 이번 회담에 응한 것 자체가 태도변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임. 경우에 따라 IAEA 사찰단 복귀 등 추가 사전조치 이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있음.
- 주목할 점은 1라운드와 같이 남북대화에 이어 곧바로 북미대화가 이어질지 여부임. 외교가에서는 1차 대화가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뉴욕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직접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그러나 이번에는 남북대화의 결과가 북미대화와 연동될 가능성도 있어 보임.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느냐가 북미대화의 성사 여부와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임.
- 비핵화 진전 없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미국 조야의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는 관측임. 북 핵 외교가의 시선이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날 베이징에 집중되고 있음.

● 남북, 2차 비핵화회담 21일 개최 합의(9/18)

-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2차 비핵화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18일 밝혔음.
- 정부 핵심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이 2차 비핵화 회담 날짜를 21일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다"면서 "회담 시간, 횟수 등 상세한 사항은 현지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도 지난번 발리에서의 1차 회담처럼 비핵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를 다루고 심도 있게 토의할 것"이라면서 "비핵화 사전조치를 확보하는 것이 회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 이어 "거기(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해서는 한국·미국·일본의 강력한 공감대가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공감대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미·일은 그동안 북한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핵과 장거리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을 비핵화 사전조치로 요구해 왔음.
- 그는 그러나 "비핵화 과정은 한두 번 회담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번에 반드시 사전조치가 이뤄진다고 보는 것은 부담스러운 기대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2차 회담에 나오는 것 자체가 사전조치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측이 어떻게 나올지는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음.

- 그는 남북 간 3차 비핵화 회담 가능성에 대해 "비핵화 과정에서 남북대화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회담 이후의 후속 협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밝혔음.
- 당국자는 2차 북미대화 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으며 중국 등을 포함한 다자간 비핵화 회담이 이번에 같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부인했음. 다만 그는 한국·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가능성에는 "베이징에 가는 계기이니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음.

● "北-이란 핵·미사일 기자재 중업자가 증개"(9/18)

-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 관련 기자재의 이란 수출을 중국의 업자 5명이 증개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북한 정세에 밝은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에 협력하기 위해 중국인 업자를 이용해 군사 목적으로의 전용이 가능한 기자재 밀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 신문에 따르면 이란 정보 당국의 고위 관계자 3명이 포함된 대표단은 지난달 초순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했으며, 이는 중국 업자를 활용한 밀수 협의가 목적이었음. 이란 측이 채용한 중국 업자는 5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은 베이징, 2명은 북한과의 국경에 가까운 훈춘에 본거지를 두고 있음. 베이징에 있는 3명의 업자는 북한 인민군 고위 관계자들과 선이 닿아있고, 훈춘의 2명은 북한의 나선특별시에 거래처를 갖고 있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제3국을 경유해 탄도 미사일 관련 물자를 수송하고 있는 혐의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이미 유엔 안보리는 복수의 결의를 통해 북한과 이란에 핵·미사일 관련 기술과 물자, 무기류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취한 바 있음.
- 이 때문에 중국의 업자들은 미국 등의 정보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공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화물의 내용물과 행선지를 위장하고 있음. 이들 업자는 이란으로부터 연간 수만 달러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미·북 관계

● "북한, 키신저 전 미국국무부에 방북 요청"(9/15)

- 북한이 최근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음. 중국의 대북소식통은 지난달 초 북한 국방위원회 소속의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키신저 전 국



- 무장관을 초청했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단지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고 RFA는 전했다.
- 미국 의회의 한 소식통도 "북한이 키신저 전 장관의 방북 의사를 타진했지만 키신저 전 장관 측이 거절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 북한은 2008년에도 미국을 방문한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을 통해 키신저 전 장관의 방북을 요청했지만, 당시 키신저 전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는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외교정책포커스'의 존 페퍼 편집장은 RFA에 "북한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영향력 있고 친중인사인 키신저 전 장관과 대화를 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처럼 북한에도 문을 열도록 키신저 전 장관이 설득하기를 기대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서면 전면 등장.. '채찍과 당근' 전술 주목>(9/18)

- '북한통'으로 유명한 웬디 서면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상원의 인준 절차를 매듭짓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한때 미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대북 유화파로 평가받은 서면이 국무부 서열 3위의 직책에 오르는 것을 막으려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음. 하지만 인준 청문 8일 만인 15일 상원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된 것은 그의 간단치 않은 내공을 말해주는 것이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절대적 신임 속에 서면 차관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음.
- 특히 그가 과거 대북정책조정관을 맡았던 경력을 감안할 때 북한 정책에 대한 확실한 영향력을 과시할 것으로 전망됨.
- 일단 그는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채찍과 당근'이라는 화두를 던진 바 있음. 당시 그는 이 접근법이 "과거 윌리엄 페리(전 대북정책조정관)가 처음으로 테이블에 올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행정부 후반기에 협상과 제재를 선택적으로 추진하려했던 '페리 프로세스'를 자신이 차관이 될 경우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됐음.
- 지난 1998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클린턴 행정부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지명, 대북정책 전반을 검토했음.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과감하게 북미 수교 등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반대의 국면이 조성될 경우 강력한 대북 압박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었음.
- 서면 차관이 청문회에서 당근 뿐 아니라 채찍까지 거론한 것은 자신이 지나치게 북한에 유화적이었던게 아니냐는 공화당 측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북한의 태도에 따라 적극적인 협상을 펼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확인해주고 있음.
- 결국 북한의 선택이 향후 서면의 행보를 좌우할 것으로 보임. 미국은 지난 7월말 뉴욕 고위급 북미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이 먼저 취해야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북측에 전달하고 대담을 기다리고 있음.



- 북한의 구체적 답변은 아직 없지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하순 러시아와 중국 방문 과정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대량살상무기(WMD) 실험의 잠정중단(모라토리엄)'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음.
-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은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음. 특히 내주 중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2차 회담을 통해 북한의 의중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됨.
- 2차 남북대화 이후 북미 고위급 대화도 곧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일각에서는 내달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후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방북하거나 한국 측에 양해를 구하고 그 전이라도 제3국에서 북미 고위급 접촉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를 통해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이 과연 내용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임. 북한의 경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바마 행정부를 의식해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임.
- 북한의 반응에 따라 미국 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지, 그리고 어떤 외교이벤트를 연출할 것인지 등 굵직굵직한 판단에 서면 차관이 깊숙이 간여할 것으로 관측됨.
-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을 상대로 노련한 서면 차관이 당근과 채찍 중에서 어떤 쪽을 선택할 지에 시선이 집중되는 국면임. 바야흐로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얽힌 '한반도 외교전'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음.

다. 중·북 관계

● "北-中, 나선특구 전력공급 6월 합의"(9/13)

- 중국이 나선 경제특구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지난 6월 북한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소식통은 13일 "지난 6월8일 북한 나선에서 개최된 나선시와 중국 지린(吉林)성의 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국이 나선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며 "최근 중국 측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고 밝혔음.
- 북중 전력분야 협력 합의문에는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나선특구의 전력 프로젝트는 훈춘(琿春)~나진 고압배전과 나선화력발전소 건설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중국 국영기업이 맡는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그는 "북한과 중국은 훈춘-나진 배전시설의 설계를 완료한 상태여서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나선화력발전소 공사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6월9일 나선특구의 착공식 개최 기사에서 북중 양국이 협력해 전력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력은 나선특구 개발에서 중요한 인프라"라며 "국이 전력 공급에 합의한 것은 나선특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장성택 부장과 천더밍 부장은 당시 전력 프로젝트를 포함해 북한 원정리~나진항 도로보수, 고효율농업시범구 건설, 아테라선시멘트공장 건설, 자동차 관광 등 나선 투자에 관한 5개 항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또 양국은 나선특구 개발 원칙에 대해 '공동운영·공동협력·공동발전'의 12개 글자로 표현하기로 합의했다고 대북소식통은 밝혔다.

● 황금평·라선 착공 3달.. "투자 실적 전무"(9/14)

- 북한과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한 황금평과 라선시 공동개발에 3개월이 지나도록 투자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양국이 지난 6월 7~9일 압록강의 섬인 황금평과 한반도 최북단인 라선 지구를 공동 관리하는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착공식까지 공동 개최하면서 개발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간 투자가 한 푼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전언임.
- 베이징의 유력한 대북소식통은 14일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투자를 독려하고 있으나 호응이 없으며 지금까지 투자가 성사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실제 북·중 양국은 두 지역에 대한 공동개발에 합의하고서 정부 간 인적 교류를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본격적인 '시장경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나, 중국 기업의 투자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해 베이징 정가에서는 우선 황금평의 경우 여건을 살펴볼 때 인접한 단둥(丹東)은 물론 랴오닝성 전체의 외국 투자를 '분산'해갈 존재라는 점에서 중국 기업의 반응이 신통치 않을 조건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음.
- 중국 정부 역시 이미 약속한 황금평의 기반시설 개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황금평 투자는 개별 기업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는 달리 라선지구는 중국의 동북3성과 북한의 경제개발을 연계한 '창·지·투(長吉圖)계획'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황금평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건이 낫지만, 북한 측이 라선 특구의 부두에 대한 '통 큰' 개방을 꺼리면서 중국 기업들이 투자여부를 머뭇거리고 있다는 지적임.
- 중국의 창춘아테집단과 북한의 라선시 간에 시멘트공장 합작이 논의됐으나 전기공급 문제로 무산됐으며, 승용차를 이용한 중국인의 라선시 관광이 허가됐으나 큰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음.
- 사실 북·중 양국은 황금평과 나선특구 공동개발을 위해 무게감 있는 인사인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과 장성택 북한 당 행정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의욕적인 행보를 시작했음.



- 아울러 중국 측에서 공산당 대외연락부와 국무원 산하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랴오닝(遼寧)·지린(吉林)성 정부가, 북한 측에서 외무성, 합영투자위원회, 라선시 인민위원회,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관계자들이 공동개발 실무진에 대거 포함돼 실질적인 경협 확대에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었음.
- 특히 북한 측에서는 장성택 행정부장의 직계인 합영투자위에서 리철(李徹 75) 전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가 북한과 중국을 오가면서 뛰고 있으나 실적을 내지 못하면서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측이 최근 금강산특구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황금평과 라선특구의 투자부진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옴.

● 주북한 中대사, 北량강도·中장백 잇따라 방문(9/14)

- 류홍차이(劉洪才) 주북한 중국대사가 최근 북한과 중국 양국 접경인 량강도와 지린(吉林)성 장백(長白)조선족자치현을 잇따라 방문했음.
- 북한 최대 규모의 헤산 동(銅) 광산을 비롯해 량강도에 매장된 풍부한 지하자원의 공동 개발을 통한 북·중 경제합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주북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류 대사가 지난 2일 량강도를 방문, 북한과 중국 기업이 공동 설립한 헤산의 헤중광업합영회사를 시찰했다고 밝혔음.
- 헤중광업은 2007년 중국 완상(萬向)그룹 산하 중광귀지(中광<金+廣>國際)가 51%의 지분을 갖고 북한 량강도광업연합기업과 합자해 설립한 동광 개발 업체로, 생산 책임은 북한의 헤산청년동광이 맡고 있으나 아직 가동은 되지 않고 있음.
- 지난해 북한이 광부들의 임금 인상과 지분 확대를 요구, 중광귀지가 철수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도는 등 양측의 갈등설이 불거졌음.
- 류 대사는 이어 지난 3-4일에는 북한과 중국이 공동 운영하는 압록강 상류의 운봉과 수봉 발전소에 들러 수력자원 이용 실태와 발전 계획을 점검했음. 류 대사는 헤중광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해 변경지역의 경제교류와 협작을 강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헤중광업이 조속히 생산 단계에 진입, 중·조 경협이 모범사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 류 대사는 앞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2개월 뒤인 지난 7월 초에도 량강도를 방문, 김희택 책임비서와 만나 경협 방안을 논의했음. 류 대사는 헤산 방문에 이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헤산과 마주한 장백(長白)현을 방문, 중국이 량강도의 지하자원 수입을 위해 건설 중인 통상구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북·중 교역 현황도 점검했음.
- 장백현 변경무역 수출입총회사는 올해 북한 조선신진회사와 공동으로 량강도 김정숙군에 있는 석영광산을 개발, 연간 4만-5만톤의 석영을 채굴해 중국에 들여오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7월부터 이 광산에서 생산되는 석영을 반입하고 있음.



- 장백현은 북한산 석영을 들여오기 위해 양국 접경인 십삼도구에 임시 통상구를 설치했으며 북한산 지하자원 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설 확충에 나섰다.
- 북한과 중국 양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류 대사는 북·중 경협을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는 지난 3월 라선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연길(延吉)을 잇따라 방문했으며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 6월 양국 고위직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라선특구 착공식을 했음. 그가 연변과 라선을 오가며 라선특구 착공식을 최종 점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음.
- 이에 따라 류 대사가 북한의 대표적인 지하자원 산지인 량강도와 이곳에서 생산되는 지하자원의 중국 반입 통로인 장백현을 방문한 것은 라선특구와 황금평 공동개발에 이어 북·중이 북한의 지하자원 공동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北中 합작 자동차조립공장 생산 시작(9/16)

- 북한이 자동차 조립 생산을 위해 중국기업과 함께 설립한 평운중성합영회사가 자동차 생산을 시작했다고 북한의 공식 포털사이트 '내나라'가 16일 전했다. 내나라는 이날 "평운중성합영회사 차조립공장이 생산을 시작했다"며 "이 공장은 조선의 수도여객운수지도국과 중국 단둥중조변경무역유한공사가 합영기업으로 설립했다"고 밝혔다.
- 이어 "공장에서는 각종 버스와 화물자동차가 조립 생산되고 있다"며 "이미 19~50석의 '금강산' 여객버스와 0.5~15t 규모의 '천리마' 화물차가 시험 조립돼 생산됐다"고 전했다.
- 또 "공장에는 각종 차조립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로 조립생산공정이 꾸려져 있다"며 "공장에서는 차 조립생산은 물론 차 수리 및 부속품 봉사도 한다"고 덧붙였다.

라. 일·북 관계

● 日 "표류 9명 탈북자"..한국행 방침(9/15)

- 일본 당국이 목선을 타고 표류해온 9명을 탈북자로 판단하고 한국에 보내기 전 나가사키(長崎)에 있는 입국 관련 시설로 옮겼음.
- 일본 정부는 14일 어선에 타고 있던 9명이 갖고 있던 서류 등을 보고 이들을 탈북자로 단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가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북한을 탈출했다는 것임. 이에 따라 이들의 일본 임시 상륙을 허가했고, 오후에는 나가사키현 오무라(大村)시의 입국관리센터로 보냈음.
- 이들을 나가사키로 보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가능한 한 이목을 끌지 않고, 빨리 한국으로 보내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됨. 나가사키는 한국과 가깝고, 나가사키공항이나 후쿠오카(福岡)공항도 멀지 않음.
- 한때 일부 일본 매체가 '일본 정부가 탈북자들의 제3국행을 검토하고 있



다고 보도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는 탈북자들이 원하는 대로 한국으로 직접 보낸다는 방침을 굳히고 조만간 한국과 구체적인 절차 등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 전례를 참고할 방침이지만, 한국행에 걸리는 시간은 짧아질 전망이다. 일본은 2007년 6월 아오모리(靑森)에 표류해온 탈북자 일가족 4명을 2주 만에 한국으로 보냈음. 당시 탈북자 중 한 명이 일본 내 금지 약물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기소유에 처분에 시간이 걸렸음.
- 한일 외교소식통은 "탈북자들을 한국에 보내는 경로 등은 아직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북한에 있을지도 모르는 탈북자들의 가족·친척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신속하고, 조용하게 보내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탈북자 9명 중 책임자를 자처한 남성은 13일 자신이 조선인민군 부대 소속이라고 주장했고, 14일 해상보안청 조사에서는 "어부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군이 외화벌이용으로 운영하는 낙지잡이 수산기지에서 일했을 것으로 추정됨.
- 이 남성은 "인민군이 가져가는 금액이 많아 날이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한국의 생활상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한국에 가면 생활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 日, 北 추가 제재조치 유보(9/18)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부가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이 검토했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음. 이 통신에 따르면 간 전 총리는 지난 6월, 북한이 9월까지 일본인 납치피해자에 대한 재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도록 내각에 지시했으나 노다 정권은 추가 제재를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 이는 일본이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과 관련국 간에 보이기 시작한 대화 분위기에 일본이 찬물을 끼얹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다 현실적으로 효과적 제재수단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하지만 일본의 납치피해자 가족은 2008년 8월 이후 일본과 북한과의 대화가 중단되면서 납치피해자 문제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들어 노다 총리에게 ▲금융기관을 통한 북한으로의 송금 전면금지 ▲현재 6명인 재입국 금지 대상자의 대폭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해 현재보다 더 엄격한 제재를 취한다 해도 상징적 의미밖에 없으며, 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일본이 냉정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정부는 북한에 대한 송금 전면금지의 경우 작년도 대북 송금액이 500만 엔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효과가 적고, 재입국 금지대상자의 확대는 '납치의 실행범이 아닌 일반 재일 북한인의 북한 입국을 막을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도항(渡航)의 자유에 반한다'는 입장임.



마. 러·북 관계

● "북-러시아, 합동군사훈련 합의" <日아사히>(9/13)

- 북한과 러시아가 이르면 올해에 합동 군사훈련을 처음으로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서울발로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음. 북한군이 다른 나라 군대와 합동 훈련을 하는 것은 이례적임.
- 양국군이 벌이기로 한 훈련은 전투기 조종사가 조난했을 때에 대비한 수색 구조 훈련으로, 이르면 연내에 러시아 극동 지역 해상에서 양국의 해·공군 병사가 참가해 훈련할 것으로 예상됨.
- 아사히신문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8월 정상회담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게 공격 훈련을 포함한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제안했지만, 러시아 측이 난색을 보여 수색 구조 훈련을 벌이는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이 신문은 또 북한이 한·미·일 군사 연계 강화에 맞서 중국에도 합동 군사훈련을 제안했다거나 8월 북러 정상회담에 수행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나 주구창 조선노동당 기계공업부장 등이 러시아 측에 무기·부품을 공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러시아가 응하지 않았다는 정보도 있다고 덧붙였다.
- 이 신문은 또 한국과 일본도 2003년 8월 극동 해역에서 벌어진 러시아군의 수색구조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다며, 한일 약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합동 수색구조 훈련이 북한군의 개혁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사태 전개를 좀 더 지켜볼 방침이라고 결론을 냈음.
- 앞서 이타르타스 통신은 지난 8월 콘스탄틴 시텐코 동부 군관구 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군 대표단이 합동 군사 훈련 등 양국의 군사 협력을 재개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북했다고 전한 적이 있음.

● "러시아, 나진~하산 철도 내달 시범운행"(9/14)

-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철도의 개보수 공사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 철도공사가 오는 10월 이 철도에 시범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영국의 철도 전문 웹사이트인 '레일'(rail.co)이 14일 보도했음.
- 러시아 측은 나진항 화물부두로 이어지는 이 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러시아 철도공사는 연내에 나진~하산의 본선과 지선을 합쳐 64km의 선로를 부설하고 선로전환장치 56개를 설치할 계획임.
- 지금까지 선로는 본선 6km, 지선 14.6km가 부설됐고, 선로 전환장치는 36개가 설치됐음. 러시아 측은 또 선로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설비도 20km 구간에 설치했으며, 웅라 현장에서는 터널 개보수도 계획하고 있음.
-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은 "이제는 (나진항을 이용해) 석탄을 수송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음.



● **김정일 "북러 관계 발전 확신"(9/14)**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북러관계의 발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김 위원장은 이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생일 축전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조러 친선협조 관계가 최근 우리 사이의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정신과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계속 좋게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은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강력한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러, 110억 달러 北 채무 탕감 결정한 바 없다"(9/15)**

- 북한이 옛 소련 시절 러시아에 진 110억 달러(약 12조 원)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러-북 양국 간 1차 협상이 실제로 진행됐으나 채무 탕감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현지 경제전문 인터넷 통신 '프라임'이 재무부 공보실 관계자를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 공보실 관계자는 통신에 "한동안의 공백기 끝에 우리(러시아와 북한)가 채무 조정과 관련한 협상을 재개한 것은 사실이며 이미 제1차 협상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공통의 인식은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아무것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이 관계자는 1차 협상이 언제, 어디서 열렸는지,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등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이날 앞서 러시아 주요 일간 신문 '이즈베스티야'는 역시 재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와 북한이 약 3년간의 공백기 끝에 지난 6월부터 채무 상환 협상을 재개했다"며 "이 협상에서 러시아 측이 북한에 채무의 90%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 10%는 북한 내에서 이뤄질 러-북 공동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북한 측도 이에 동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 신문은 러시아 측에서 재무부와 대외경제은행 등을 비롯한 몇몇 기관들이 참석한 이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올해 말까지 양국이 관련 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 기 타

● **유럽 산업시찰단 내달 북한 방문(9/16)**

- 유럽 기업인들이 다음달 17일부터 2박3일 동안 사업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했다.
-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인 '유럽아시아협력국'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북한 산업시찰단을 모집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북 계획을 밝혔다.
- 유럽 기업인들은 북한에서 공장들을 직접 방문하고 북한의 정책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망을 구축하며 10월17일에는 연례행사인 '평양 추계 국



제상품전시회에 참석할 예정임.

● "北-EU 올 상반기 교역 60%↓"(9/17)

- 올해 상반기 북한과 유럽연합(EU) 사이의 교역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가량 감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했다. 방송은 EU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올 1~6월 EU와 북한간 교역 규모는 4천580만 유로로 작년 상반기의 1억1천550만 유로보다 60%가량이 줄어든 액수라고 설명했다.
- 북한의 대 EU 수출액은 3천17만 유로, 수입액은 1천560만 유로이며 EU 국가 중에서 북한과의 교역액이 많은 순서는 독일(1천800만 유로), 네덜란드(1천360만 유로), 이탈리아(380만 유로) 등이었음.
- 북한이 EU에 많이 수출한 품목은 의류(1천만 유로), 소금 및 유황(850만 유로) 순이었고 북한이 EU에서 많이 수입한 품목은 기계류, 광학 물질, 전기제품 등이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국회 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상정(9/16)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상정했음.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강력 반발 속에 비준안을 직권상정했음.
- 남 위원장은 민주당 최재성 김동철 의원 등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외통위 소속이 아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이 직권상정 저지에 동참하려 하자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은 채 구두로만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한다"며 직권상정을 선언했음.
- 한미FTA 비준안은 지난 6월3일 국회 제출 후 106일 만에 상정된 것임.
- 남 위원장은 직권상정에 앞서 "오늘이야말로 객관적으로 미 의회의 비준 절차가 시작됐다는 판단을 했다"며 직권상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은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정하는 것"이라면서 "강행처리를 하지 않고 미국보다 먼저 처리하지 않으며, 미국과의 재협상이 필요할 경우 내가 앞장서 상정을 철회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한·중 관계

● 한·중 경제장관회의 28일 서울서 개최(9/16)

-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0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 한국 측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재정부와 환경부 담당 국장 등 9명이 참석하며 중국 측에서는 장펑(張平) 국가발전개



혁위원회 주임(장관급) 등 8명이 참석함. 국가발전개혁위는 중국의 거시·실물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경제 수석부처로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함.

-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거시경제 동향과 중장기 발전전략 ▲주요 경제 정책 및 협력방안 논의 ▲부동산시장과 물가 안정, 에너지절약과 환경 보호 등이 의제로 다뤄짐.
- 재정부는 "양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세계 및 양국의 경제동향,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목포해경 EEZ 침범 불법조업 中어선 2척 나포(9/17)

- 목포해경은 17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음.
- 이들 어선은 16일 오후 11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92km 해상에서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측 EEZ를 7.5km가량 침범해 아귀 등 잡어 90kg를 포획했다가 해경의 검문검색에 적발됐음.
- 목포해경의 한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의 휴어기가 끝나고 지난 1일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돼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 목포해경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0척을 나포해 담보금 6억1천400만원을 부과했음.

다. 한·일 관계

● 정부, 금주중 日에 '위안부' 양자협의 제안(9/15)

-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15일 일본 정부에 양자협의를 공식 제안했음. 정부가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근거로 공식 양자협의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외교통상부 조세영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가네하라 노부카츠(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이 같은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음. 이번 제안은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근거하고 있음.
- 외교부 조병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월 30일 현재의 결정을 진지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양자협약이 이뤄지고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조 대변인은 "청구권 협정 3조1항에 따른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나갈 예정"이라면서 "일단 양국 간 협의를 제안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일본 측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면서 "현재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청구권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근거해 공식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 정부는 이번 제안에서 대일 청구권에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의 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양자협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이어서 양자협의 개최에 동의할지가 주목됨.
- 정부는 일본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수위를 높여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일본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외교부 동북아국과 국제법률국 관계자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향후 대응조치와 관련한 전반적 사항을 연구해나가기로 했다.

● 무토 日대사 "한일 FTA 교섭 재개해야"(9/16)

-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는 16일 "중단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토 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동북아위원회 초청으로 열린 강연을 통해 "가치관과 이익·발전 관계가 비슷하고 문화적으로 가까우며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한다면 세계 경제시장을 선도하는 규칙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두 나라가 세계 비즈니스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양국의 장점이 보완 관계가 돼야 한다"면서 "일본은 자금력과 기획력·정보력·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한국은 창조력과 영업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 그는 한국 민간기업에 "적극적으로 일본 기업과의 가능성을 찾아 달라"고 당부한 뒤 "일본 정부도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경협은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언젠가 한국과 통일이 된다면 한국과 일본, 북한이 규모 있는 하나의 시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무토 대사는 최근 한일 관계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라면서 "한국은 이것을 역사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본은 영토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무토 대사는 "역사의 사실은 하나지만, 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는 '사실을 찾아간다'는 자세로 공동연구를 해 역사 교과서



와 관련해 좋은 협의를 이뤄냈다. 한국과 일본도 객관적으로 사실을 찾아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사실 시민 레벨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이미 국경을 느끼지 못하는 관계가 됐다"면서 "이러한 한일 간 가교가 돼 새로운 100년의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음.

● **李대통령, 21일 노다 日총리와 첫 정상회담(9/16)**

-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 기간인 21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함. 유엔 총회 개최일에 열리는 이번 회담은 노다 총리 취임 이후 첫 번째 한일 정상 회담이어서 향후 양국 관계의 흐름을 가늠해볼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전, 북한 비핵화, 6자 회담 재개, 양국 간 교류 확대 등 양국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며, 최근 우리 정부의 위안부 청구권 협의 제안을 일본이 거부한 대목이 의제에 오를지도 관심사임.
- 특히 이 대통령이 일본의 계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왜곡 시도와 관련해 어떤 수위의 언급을 할지 주목됨.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통해 우회적 경고 메시지를 보낸 만큼 더 구체적인 수준의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 이 대통령은 총회 기간 일본을 포함해 3~4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 **日 "위안부 문제 해결됐다" 주장 되풀이(9/16)**

- 일본이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청구권 협의 제안에 대해 일단 "법적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음.
-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외무성 부대신(차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제안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청구권 협의와 관련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1965년 국교정상화 때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최종적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음.
- 아마구치 부대신은 이 같은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위안부에 대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이런저런 방안의 검토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여운을 남겼음.
-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일본 측이 '법적으로 해결 완료'라는 입장에 따라 협의를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풀이했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는 "아직 일본 측으로부터 협의 제안에 대한 응답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 앞서 일본은 1995년 7월 민간 모금을 기반으로 일본군 위안부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을 창설했다가 2007년 해산했음. 당시 한국에서는 아시아여성기금이



일본 정부의 책임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음.

- 야마구치 부대신은 15일 회견에서 이를 거론하며 "한국에는 이를 받지 않은 분이 많다는 점이 (협의 제안에) 영향을 줬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 한·러 관계

● <한러 가스관 협상 탄력..정세변화 돌파구되나>(9/14)

- 가스관 연결사업을 둘러싼 남·북·러 사이 협상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음. 그동안 3국 정상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온 이번 사업이 점차 실무차원의 협상으로 구체화하여가는 양상임. 우리 측 실무총책임자 격인 주장수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이 14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이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계기점 임.
- 특히 주 사장은 이 대통령이 1990년대 초 현대건설 회장 시절 구소련 정부와 가스관 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당시 현대종합상사 상무로서 실무를 도맡았던 인물임.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정확히 읽고 사업방향 설정과 함께 실무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핵심 인사라는 평이 나옴.
- 일단 이번 방문은 공식 협상과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러시아의 사업구상과 계획을 듣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
- 특히 그동안 북한 측과 실무협상을 벌여온 가스프롬이 북측의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하고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여 이를 '청취'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임.
- 그러나 그동안 가스공사와 러시아 측 카운터파트인 가스프롬이 수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주 사장의 이번 모스크바 방문은 단순한 실무접촉 차원을 넘어 어느 정도 '알맹이 있는' 협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이번 가스공사-가스프롬 차원의 접촉은 다음달 24~2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러 경제공동위원회로 이어지며 가스관 협상에 가일층 탄력을 붙일 것으로 예상됨. 우리 측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러시아 측에서는 빅토르 바사르긴 지역개발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함.
- 바사르긴 장관은 북·러 경제공동위 위원장을 맡아 지난달 말 북한 측과 경제공동위원회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가스관 연결사업과 관련한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이번 한·러 경제공동위원회는 장관급에서 가스관 사업을 논의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임. 외교가에서는 오는 1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1차 한국·러시아 지역국장협의회도 이 같은 협상과 일정한 연계성을 띠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으나 외교당국자들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음.
- 11월은 이번 가스관 협상이 중요한 분수령을 맞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11월 초·



- 중순 모두 세 차례 회동할 기회가 있으며 이중 한차례 양자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관측임.
-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는 11월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12~13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그리고 18~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임.
 -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이 가스관 사업과 관련해 원칙적 수준의 합의만 하더라도 전반적인 협상 흐름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북핵 6자회담 재개 흐름이 교착되는 가운데 남·북·러 가스관 협상이 정세변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외교가에서 고개를 들고 있음.

● 남·북 '가스 대표' 동시 방러...3자회동 가능성(9/14)

- 한국의 가스공사 사장과 북한의 원유공업상이 거의 동시에 러시아를 방문했음. 14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이 이날 3박 4일 일정으로 남북러 PNG(파이프라인 천연가스) 프로젝트 실무협의를차 러시아로 떠났음.
- 주 사장은 이 사업의 러시아 측 파트너인 가즈프롬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PNG 프로젝트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과 북한 측 동향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부문을 총괄하는 김희영 원유공업상을 단장으로 하는 원유공업성 대표단이 13일 러시아로 떠났다고 보도했음.
- 통신은 김 원유공업상의 방러 배경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 소식통은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가스공사와 원유공업성, 가즈프롬은 오래전부터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추진해온 주체들로, 이들 기관의 대표격인 인물들이 같은 시기에 러시아에 머물게 됨에 따라 '3자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짐.
- 주 사장은 지난달 초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가스관 사업의 러시아 측 실무자인 알렉산드르 아나넨코프 가즈프롬 부사장을 만났으며, 김 원유공업상도 지난 7월 초 평양에서 아나넨코프 부사장과 회담했음.
- 남-북-러를 잇는 가스관 사업은 지난달 24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가스관 사업을 본격 논의하기로 하면서 3국의 현안으로 부상했지만, 일각에서는 에너지 안보문제 등을 거론하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음.
- 그러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추석맞이 특별좌담회'에서 북한이 가스관을 차단할 경우 러시아 측이 책임지고 배를 이용해 가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계약을 해두는 방안 등이 있다며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사업이 급진전될 수 있음을 시사했음.



마. 미·일 관계

● "日 후텐마, 가테나 기지와 통합안 부상"(9/14)

- 일본 오키나와(沖縄)의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를 같은 오키나와 내 가테나(嘉手納) 기지와 통합하는 방안이 미국내에서 부상했다고 NHK방송이 14일 보도했음. 이 방송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13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후텐마 기지를 가테나와 통합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음.
- 카터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의 발언은 칼 레빈 국방위 위원장이 가테나 기지의 부대를 소멸한 뒤 후텐마의 기지 기능을 가테나에 통합하는 새로운 '가테나 통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것이었음.
- 레빈 위원장과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가 후텐마와 가테나 기지의 통합을 언급함에 따라 미국 국방부도 이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임.
- 미국과 일본 정부는 작년 5월 후텐마 기지를 같은 오키나와 내 나고(名護)시 헤노코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나 오키나와 주민들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해 구체적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음. 미국은 일본에 오키나와 주민들을 설득해 조속히 후텐마 이전 계획을 구체화하자고 압박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바. 중·일 관계

● 중국, 日·比 남중국해 협상에 경계심(9/12)

- 일본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로 정부 부처 부국장급 협상을 개최했다면서 중국이 경계심을 드러냈음.
- 양국이 지난 9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와 다표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갈등이 진행 중인 동중국해 이슈를 주요 의제로 정부 간 협상을 개최했으며, 이는 중국에 맞서려는 공동전선으로 보인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를 포함한 현지 매체들이 12일 보도했음.
- 매체들은 협상에서 일본은 원자재 핵심 수송로인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항행 자유권을 강조하면서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힘을 실어줬고 필리핀은 중·일 마찰지역인 다표위다오 문제에서 일본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음. 매체들은 해당 협상에 일본 측이 외무성·방위성·해상보안청 등의 다표위다오 분쟁 관련 부처 대표를, 필리핀 측이 해안경비대 등의 남중국해 유관 부문을 참석시킨 데 주목했음.
- 중국신문사는 특히 일본이 지난 7월 9일 브루나이 부근의 남중국해에서 미국·호주와 공동으로 3개국 간 첫 합동 군사훈련을 한 것을 비롯해 남중국해에 부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음.
- 중국신문사는 아울러 지난 8월 베그니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일본



을 비밀리에 방문했다고 밝히면서 최근 양국 간에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 이런 가운데 중국은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달 말 방중을 계기로 양국 간에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실리를 챙기면서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미국 등의 제3국이 개입하는 다자 방식이 아닌 양자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거부한 데 불쾌감을 느끼고 있음.
- 아울러 아키노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남중국해에 투입할 미국산 군함을 사들일 것이라고 발표하자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다는 지적임.

● 〈中·日, 수교 40주년 앞두고 우호 제스처〉(9/17)

- 중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 40주년을 앞두고 서먹해진 관계를 복원하고자 우호 제스처를 취하고 있음. 1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리커창(李克強) 상무 부총리의 연내 방일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
- 리 부총리는 내년 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뒤를 이어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 정치가다. 차기 국가주석 취임이 확실시되는 시진핑(習近平) 부주석도 2009년에 방일한 바 있어 차기 중국 지도자가 모두 취임 전 일본을 찾게 됨.
-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민주당 전 간사장과 친교가 깊은 리 부총리는 일본에서 민주당 인맥 등을 만나 남중국해 가스전 교섭 재개 등 양국 관심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리 부총리는 지난 2월에도 '연내 방일'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고, 당시 '한국과 일본은 같은 시기에 방문할 공산이 크다'고 알려져 방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림.
- '일본 가요계의 총리' 격인 최고 인기그룹 스마프(SMAP)는 16일 베이징 노동자(工人)체육관에서 팬 4만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콘서트를 열었음. 1988년 결성된 스마프가 외국 콘서트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임.
- 리더 격인 나카이 마사히로(中居正廣)는 "국경을 넘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친구로서 함께 걸어가자"고 호소했고, 중국어 번안곡을 포함해 30곡을 열창했음. 스마프는 지난해 10월 이틀간 상하이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9월에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와 주변 섬) 주변에서 일어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충돌 사건 이후 연기했었음.
- 센카쿠 영유권 갈등으로 최악의 대립으로 치달은 양국이 이처럼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올해 신해혁명 100주년과 내년 중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앞두고 관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하지만 센카쿠 열도 주변 등에서 언제든지 충돌이 재연될 개연성이 있어 의도대로 상처를 봉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사. 중·러 관계

● 러시아 푸틴 총리, 내달 중국 방문(9/15)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오는 10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음. 러시아를 방문 중인 우방귀(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14일 모스크바 교외 오가료보 관저로 푸틴 총리를 방문해 환담하는 자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윈자바오(溫家寶) 총리 등이 모두 다음 달 총리의 중국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 이에 푸틴 총리는 "반드시 10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약속했음.
- 우 상무위원장은 이어 "중국은 러시아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무역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푸틴 총리도 "중국은 러시아의 믿을만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현재 상황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 상무위원장은 14일부터 나흘 동안 러시아를 방문 중임.

아. 기 타

● "러 동해 훈련 표적은 日 아니라 美·中"(9/15)

- 러시아 폭격기가 최근 일본 열도 주변을 일주하는 등 동해 등지에서 군사훈련을 벌인 데 대해 '표적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5일 분석했음.
- 이 신문은 러시아가 올해 캄차카반도 동쪽 기지에 최신형 핵잠수함을 배치할 계획이고, 이와 더불어 오후츠크해 주변의 해·공군 전력도 증강될 것이라고 예상했음. 신형 잠수함에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8천km로 미국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음.
- 또 러시아가 겉으로는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중국의 급성장을 경계한다는 점을 들어 이번 훈련에는 '오후츠크해는 우리 영역이니까 넘보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효도 신지(兵頭眞治) 일본 방위연구소 미국·유럽·러시아 연구실장의 코멘트를 실었음.
- 러시아가 이처럼 극동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 대해서는 '서구 국가와 안전보장상 관계가 비교적 안정되자 러시아의 관심이 동아시아로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일본이 돌려받길 원하는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 명 북방영토)의 가치도 러시아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짚었음.